

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 해 넘긴다

주민 반발·정치권 이해관계 얽혀...내년 상반기도 어려울 듯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결정 유보...3가지 시안 제시

광주지역의 구별 편입된 인구수를 재배치하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일부 주민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작업이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내년 4월, 2020 총선 선거구 확정 이전에 자치구 경계를 재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1일 광주시는 "광주시 균형발전 전략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일부 주민 반발 등으로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경계조정안을 결정하지 않기로 했고, 다만 용역 기관은 국내외 사례 분석과 중장기 도시계획 등을 고려해 소·중·대폭 등 3가지의 경계조정 시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서는 김병완(광주대 교수)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 위원장 주제

공을 수행기관인 한국조지학회·경인행정학회가 '자치구 경계조정 개편 시안'을 보고했다. 용역 기관은 경계조정의 원칙으로 광주시의 균형발전 목적에 비추어 지역행평성을 우선 적용 원칙으로, 자연 지리성과 생활 편의성, 지역 정체성을 보완적용 원칙으로 삼았다.

자치구 간 인구 편차를 현재 23.5%에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 이내로 조정하고 정치적 혼란을 막기 위해 현재 광주시 8개 국회의원 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특히, 동구의 인구 확충을 위해 인접 자치구의 인구를 편입하되 과소지역인 서구와 남구는 가급적 유지 등의 원칙 기준을 제시했다.

이 같은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3가지의 경계조정 시안을 제시했다. 시안 1은 소폭 조정으로 북구의 일부분을 동구에 편입한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점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인구 규모는 동구가 9만6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북구는 44만3000명에서 37만6000명으로 조정되며, 광주시 구간 인구 편차는 16.3%로 완화된다.

시안 2는 중폭 조정으로 북구와 광산구 일부분을 동구와 북구에 각각 편입하는 안이다. 북구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점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인구 규모는 동구가 9만6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북구는 44만3000명 현행유지, 광산구는 41만6000명에서 34만9000명으로 조정된다. 구간 인구 편차는 18.8%로 전국 광역시 평균인 18.6%에 근접하게 된다.

시안 3은 대폭 조정으로 전체 자치구를 부분 조정하는 안으로 미래 인구 규모 형평성과 생활 편의성, 풍암지구와 진월지구 연계강화 등을 반영한 안이다. 북구의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 문화동, 풍향동, 두암 1·2·3동, 석곡동의 동구 편입, 광산구 점단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월곡 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의 서

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 다.

인구 규모는 동구가 9만6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남구가 21만9000명에서 36만5000명으로, 남구가 21만9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북구가 44만3000명에서 40만명으로, 광산구가 41만6000명에서 25만20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구간 인구 편차는 13.2%로 낮아진다.

이들 시안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소폭개편 25.8%, 중폭개편 39.8%, 대폭개편 34.4% 등으로 나타나 중폭개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국회의원, 시·구의원, 조정 대상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소폭개편에 대한 선호도(48.1%)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간 경계조정은 광주시가 서둘러 최종안을 도출하더라도 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만도 6개월여 걸려 내년 상반기에도 마무리하기 힘들 전망이다.

구 편입, 서구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등이 다.

인구 규모는 동구가 9만6000명에서 20만5000명으로, 남구가 21만9000명에서 36만5000명으로, 남구가 21만9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북구가 44만3000명에서 40만명으로, 광산구가 41만6000명에서 25만2000명으로 각각 조정된다. 구간 인구 편차는 13.2%로 낮아진다.

이들 시안에 대한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소폭개편 25.8%, 중폭개편 39.8%, 대폭개편 34.4% 등으로 나타나 중폭개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또 국회의원, 시·구의원, 조정 대상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서는 소폭개편에 대한 선호도(48.1%)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구간 경계조정은 광주시가 서둘러 최종안을 도출하더라도 시·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행정안전부의 심의 기간만도 6개월여 걸려 내년 상반기에도 마무리하기 힘들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도의원이 여성위원장에 여성비하·막말 '파문'

행감장서 위원장 명패 걷어차 민주당 전남도당 조사 착수

전남도의회이 소속 상임위원회 여성 위원장에게 막말과 폭언, 여성 비하 발언을 수차례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막말을 하고 명패와 탁자를 걷어차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 의원이다. 전남도의회는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를 12일 긴급 소집했고, 민주당 전남도당은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하고,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혜자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소속 상임위 A의원원이 지난 7월 개원 이후 수차례 막말과 여성 비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상임위 원구성 직후 A의원원이 '지금까지 내 평생에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을 모실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불편할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또 "A의원원이 전화로 '성질이 더럽고 지저분하고 까칠한 사람이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덧붙였다.

A 의원은 지난 8일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켜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막말을 하고 명패와 탁자를 걷어차는 행동을 해 비난을 샀다. 여성 상임위원장을 상대로 한 여성 비하 발언과 협박으로, 광역의원 자질 논란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A의원원의 행태에 대해 조만간 공식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12일 오후 1시20분 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 소집, A의원 사태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여성비하·갑질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하고, 자체 조사에 들어갔다.

전남도당은 11일 "최근 도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등 일부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인해 국민과 당원, 언론의 질타를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윤리규범을 위반한 당 소속 공직자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A의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방의원의 비위사실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동

시, 민간기업 대상 간담회

광주시는 2018년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광주역전,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9일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전국 주요 건설사 등 민간기업을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1일 코레일 오영식 사장과 업무협약으로 내년에 시·코레일이 공동 추진하기로 한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구상 용역'의 민간투자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으로 마련됐다. 시는 간담회에서 광주역과 주변 지역 50만㎡를 대상으로 시행하

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철도차량기지 이전 후 코레일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역사복합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도시재생 리츠(REITs)를 통해 총사업비 50% 이내로 융자해주는 상품과 20% 이내 출자해 주는 상품을 소개하고, 민간기업의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시는 앞으로 광주 지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시는 '광주역전(逆戰), 창의문화산업 스타트업 밸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예비사회적기업 20곳 새로 지정

전남도는 예비사회적기업 20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사회적기업에는 70억 원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기업 고도화 등을 돕는다고 11일 밝혔다.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전통놀이 교육·놀이문화콘텐츠 개발사업을 하는 '우리노리협동조합', 전통무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가치이름'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들이 포함

됐다. 또 지역특산물을 활용해 농수산물을 가공·유통하는 '썬볼돌바다사람들', 농업회사법인 '썬주시골농장' 등도 새로 뽑혔다.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자리 창출·사업 개발·시설 정비 등의 재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공공구매 우선 구매 혜택도 주어진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통 방식 고기잡이 '가래치기' 9일 전남 강진군 병영면 충고저수지를 찾은 지역민 3000여명이 물이 빠진 저수지 바닥을 가래로 쳐가며 붕어, 가물치, 메기를 맨손으로 잡아 올리고 있다.

광주 싱크홀 을 41건...전국 평균보다 6배 증가

노후 하수관이 주원인 광주시 행정감사자료 땅이 내려앉아 큰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 현상이 광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에서 올해 발생한 싱크홀이 전국 평균 증가폭에 비해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장재성(민주·서구1) 의원이 발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건)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했다. 전국 평균 증가율 1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올해 발생한 싱크홀 가운데 36건(87.8%)은 노후 하수관 문제로 파악됐고, 다음으로 도로 3건, 기타 매설물 1건,

원인 미상 1건 등이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발생한 105건 중 80건(76%)이 하수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하수관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345km에 달하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251km에 이르는 등 설치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관로가 전체 4252km 중 38%에 이르고 있다.

구별로는 광산구가 1349km(31.7%)로 5개 구 가운데 가장 길고,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역시 광주시 전체 1596km 중 광산구가 643km(40.2%)를 차지하고 있다.

장 의원은 "노후 관로와 싱크홀이 특정 지역(광산구)에 집중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며 "도로 위의 폭탄으로 불리는 싱크홀은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만큼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싱크홀의 위험성에 공감한다"며 "26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하수관로 17km 1531개소에 대해 2020년까지 정비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J1 4point
- J2 5point
- J3 6point
- J5 8point
- J6 10point
- 12point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